

권두언

<인권연구> 제7권 제2호를 발간합니다. 이번 호는 앞선 호들과 달리 좀 특별합니다. 어처구니없는 12.3 비상계엄사태로 야기된 대혼돈의 비상상황 속에서 발간하게 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상처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우리들의 외침을 담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번 호를 들춰보게 될 미래세대의 인권연구자들이 그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를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겨야 할 과외의 사명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권두언에 뒤이어 지난 12월 10일 인권연구자들 한분 한분의 뜻과 열정을 모아 발표한 “당신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로운 일상을 찬탈할 수 없다”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12월 3일, 그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짧은 시간에 인권의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민주공화국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자긍심을 안고 살아가던 대한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천인공노할 친위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계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독립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여 선거 관련 자료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야당은 물론 여당의 대표나 전현직 법관들마저 불법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려는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의 효과적인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은 가까스로 해제되었고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주요한 장면들을 온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생중계로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은 누우치기는 커녕 뻔뻔스럽게 거짓 주장을 내세워서 국민이 잠시 위임했던 권력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꼼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주권자

들이 헌법의 절차에 맞추어 법의 정신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떻게 훼손하였는지 온당한 책임을 추궁하려 하지만 갖은 꾀변과 술수로 책임을 모면하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내란 시도로 우리들의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위상과 공신력을 갉아먹은 것도 모자라 사후 수습마저 어렵게 만듦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회복력을 보여줄 절대절명의 시간들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분하지만,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다시 한 번 우리의 다짐을 거듭 외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로운 일상을, 또 다시, 더 이상, 찬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네들의 무도함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미래세대가 당연히 누려야 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자유롭게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 중요한 일상 중 하나가 <인권연구>입니다. <인권연구>는 학술연구생태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 두 학회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간행하는 인권 전문 학술지입니다. <인권연구>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장되고 더 높은 수준에서 꽃피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과 실천의 기록입니다.

이번 <인권연구> 제7권 제2호는 학술적 방법론에 입각한 7편의 연구논문과 현장의 감수성과 실천의 의지를 담은 5편의 현장논단으로 꾸며집니다. 우선 7편의 연구논문은 인권사, 북한인권, 아동인권, 근로자의 평등권, 대학 내 인권,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매우 광범위한 인권 영역을 다양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고 있습니다.

인권사 연구로 2편이 수록되었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권’의 위치: 1970-80년대의 ‘저항’과 ‘생존’의 언어”는 1970년~8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논의된 인권의 내용을 파악하여 민주화운동과 함께 형성되어 온 인권 개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명

서 등 살아있는 사료들과 구술자료를 활용한 방법론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개념이 어떤 궤적을 그려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소중한 연구입니다. “한국의 난민권리운동과 시민사회 (1999-2012)” 또한 활동가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현장성 있는 인권사 분야의 연구 성과입니다. 난민권리운동의 과정이 국제난민규범의 수용과정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입니다.

한편 다양한 인권 분야의 특별한 쟁점과 관점을 다룬 5편의 연구들도 독자들을 기다립니다. “Applying Judicial and Non-Judicial Approaches for Human Rights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는 북한의 인권 책임성을 사법적 차원과 비사법적 차원으로 구별하여 사법적 차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비사법적 차원의 노력이 가지는 의의를 제시한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출생등록과 국적취득의 선후관계 고찰: ‘국민’에 한정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모순과 한계”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중심주의에 매몰되어 보편적 가치인 아동의 인권을 법적 보호망으로부터 배제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국적의 다양성과 변동을 포섭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현실적 기대효과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현대 산업재해보상과 근로자 간 차별적인 대우에 관한 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례와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례의 평석을 겸하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재로 산업재해영역에서 근로자간 차별 대우의 실상을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평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규범이 헌재판례에 투영되는 과정을 살핀 점이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유용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대학 내 성적 괴롭힘·인권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학내 인권제도화의 실재를 분석하고 있는 “2010년대 대학 내 성적 괴롭힘·인권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학내 인권 제도화의 한계”는 대학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의 중국적 버팀목은 자치 역량을 기르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형 폐지 이후 대체형벌의 지평과 전망”은 절대적 종신형으로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규범적, 현실적 문제점을 비교법적 증거를 다양하게 동원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도 어김없이 5편의 현장 논단이 현장의 문제의식과 과제를 땀냄새가 뽀뽀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공감에 호소합니다. 특히 전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다룬 현장 논단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도드라지는 것이 주목할만 합니다.

이 난세에도 묵묵히 우리의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권연구>의 발간도 이처럼 희생과 헌신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이주영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과 발간 실무를 맡아 봉사해 주신 김혜정 간사님,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의 담당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인권법학회장 김 중 철